■ 제주도-4·3평화재단, '제주4·3 유네스코 등재' 심포지엄

"세계기록유산 여부 기록수집이 관건"

유네스코측 시간·장소 등 등재 요건 증명 주문
도 "진실과 인권, 화해와 상생 4·3가치 알릴 것"

제주 4·3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4·3당시 기록물들의 수집·확보 등 등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14일 제주 호텔더원에서 '제주4·3기록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귀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의장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주제 발표를 통해 세계기록 유산 등재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귀배 의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추세로 1997년 전반적으로 문서형태의 기록 위주, 1999년 비 문서 자료 등재 시작, 2001년 시청각 자료로 기록유산의 범위 확장, 2005년 카세트테이프 형태의 기록 등재, 2011년 도서, 사진, 영사물 등 더욱 다양한 형태와 양식의 기록유산이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등재 기준과 관련해 "유산의 진정성, 완결성, 독창적, 비(非) 대체적 등이 중요하며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으로 시간, 장소, 사람, 대상·주제, 형태·스타일 등 5가지 요소 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으로 그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영관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팀장은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4·3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4·3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류와 함께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성숙한 인권국가로 세계에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면서 "2019년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전담연구팀을 구성해 기존 사례 연구와 등재 대상 기록 선정 및 분류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민간기록물 수집 캠페인 전개, 4·3진상규명운동사 주요인물 영상인터뷰 기록, 신규 미국 자료 발굴을 위한 자료 조사 등 새로운 기록을 수집하는 일에도 주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냉전과 분단, 독재와 분열을 극복하고 진실과 인권, 화해와 상생을 지향한 4·3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등재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14일 열린 제주4·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포지엄에서 김귀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 의장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형사고발" vs "세계유산 구역 아니"

월정 주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대립

오는 19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재개를 앞두고 월정리 주민들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제주도가 반박에 나서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반대하는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불법공사를 중단해야 하며 공사를 강행할 경우 제주도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월정리 비대위 측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은 2017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을 당시 공사에 가장 영향을 받을 용천동굴을 누락했고 올해 공사기간 연장 허가를 하면서 슬그머니 용천동굴을 포함시켰다"며 "제주도는 2014년 증설 공사 당시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장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검토해 유네스코에 보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정과 공사 허가 과정은 수많은 위법과 기망이 얽혀있고 이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바로 잡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비대위는 제주도지사 이하 관련 공무원 모두를 형사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비대위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계유산본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현상변경 시 신청서상에는 대상 문화재가 당처물동굴로 기재돼 있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용천동굴에 보다 비중을 두고 영향을 검토한 뒤 허가했다"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세계자연유산 구역에 속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증설은 중요한 복원사업이나 신규 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세계유산위원회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의 결과 보고 무대응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문화재청과 협의해 2023년 국비 포함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천동굴 호수구간(800m)에 대한 학술조사와 함께 잠정적인 영향도 조사할 계획이며 학술조사가 완료되면 2024년 유네스코에 보고하고 호수구간을 유산지역에 포함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도영기자

제주시 일방통행로 구간 확대될까

강 시장 "읍면동 요청 많아"
수요조사 통해 7개 구간 접수

제주시지역 일방통행로가 늘어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교통 흐름 개선 효과 등을 들며 일방통행로 조성 확대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관내 일방통행로는 4개 블럭, 60개 구간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말까지 진행된 수요 조사에서는 7개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이날 주간 간부회의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 대책 중 하나로 일방통행로 시설을 언급했다. 강 시장은 최근에 조성된 법원과 하귀 지역 일방통행로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을 제시하며 "대규모 상가, 주택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일방통행로 시설은 교통 흐름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시장은 "읍·면·동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해당 지역에 일방통행로를 조성해달라는 분들이 많았던 만큼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부적격자를 119구조대원으로 발령"

도감사위 제주소방 감사… 행정상 조치 11건 시정 요구

제주소방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방공무원을 구조대원으로 인사 발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4일 2022년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소방안전본부 등 5개 기관에서 2019년 6월 1일부터 2022년 4월까지 추진한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도감사위는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161만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 결과 119구조대에 배치해야 하는 인명구조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공무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방공무원을 119구조대원으로 인사 발령해 운영하는 등 119구조대원 및 펌뷸런스 대원 자격자 편성·운영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방공무원 피복을 구매하면서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함에도 납품요구 대상금액을 1억원 미만이 되도록, 구매 물량을 시기 또는 규격별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 조치됐다.

이와 함께 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정근수당 및 연가 보상비를 감액하지 않은 채 지급했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 계좌를 개설 목적과 다르게 전기요금 결제 용도 등으로 혼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잘못 지급된 연가보상비와 정근수당 합계 161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 계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했다.

한편 도감사위는 응급분만 구급역량 강화로 안전 출산을 지원하고 구급장비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도영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